|  |
| --- |
| [질문]   1. 요즘은 정보화시대가 아닌 2008년 미국의 IT 컨설팅 회사 가트너(The Gartner Group)가 처음 사용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사회 또는 초연결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의 파놉티콘으로 수많은 CCTV가 도시를 사각지대 없이 감시하고, 드론이 24시간 순찰을 돌게 됩니다. 이미 유럽은 사방에 CCTV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은 안심할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파놉티콘이란 감옥 속에 갇힌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안전한 감옥인지 알 수 없게 된다. 3.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해줘야만 한다. 4. 빅데이터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라더는 동전의 양면이다.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이다. 5.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오히려 모든 국민들을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며 기업과 결탁해 국민 전체를 감시하는 국가감시(state surveillance)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기술발전의 명분 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 속에 감시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린 국민은 자기검열을 통해 의사표현을 제한받고, 위축되어버린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6. 빅데이터가 고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셨는데, 딥러닝이라 불리는 AI 인공지능 학습이나 자료들의 통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5년 7월에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국내 도감청을 목적으로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CCTV나 IoT를 통한 치안유지와 서비스복지가 아닌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가 아닌가요? 7. 저자의 주장처럼 우리는 서로를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은 결코 단발성으로 지켜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유지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에서 신뢰를 회복한 정보기관이, 적법한 활동으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감시를 지속할 때만이 국가안보를 지키며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질문]   1. 확실히 9월 16일에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집에서 다친 상처로 교사를 죄인 취급한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CCTV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방에 CCTV가 있다면 교사로써 부담감이 있겠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CCTV의 개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또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사의 인권을 우선해버린다면 사회적으로 더 약자인 유아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고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4. 훈육은 확실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로 인해서 평소에 친근감을 드러냈던 말장난 등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CCTV 설치가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였다면 CCTV를 늘리고 부모와의 오해를 푸는게 신뢰를 쌓는 일이고 감시의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아니다. 6. 당연히 아동학대는 cctv 를 설치 안했다고 해서 발생하는게 아니다. 7.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야한다 했는데, 이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기본교육과 연장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하의 보육을 말하고, 연장보육은 말그대로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이를 보아 보조 인력 충원이나 정서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발달해야 할 상대적 약자인 아이들을 갑작스러운 아동학대로부터 막아야만 한다. |
| 영유아보육법   이 법은 영유아(img37964601)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3년 213건이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285건, 2015년 424건으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587건, 2017년 815건(잠정치)으로 2013년부터 5년새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는 2015년에 739개, 2016년은 845, 2017년은 954, 2018년은 1032개로 나타단다.  **[자유토론]**  사실 저는 CCTV 설치 외에도 교사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CCTV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닌 직업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보육교사교육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어서 1~2년간 사이버 수강을 하고 의무 실습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아이를 보살필’ 인성이 낮고, 보육지식이 모자란 사람들까지도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에서 아동학대자 922명의 특성 및 원인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보육태도’가 350명(43.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222명(27.6%)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진 경우는 120명(14.9%)에 불과했다. 이밖에 성격 및 기질 문제가 97명(12.1%)이었다. |

* 출처

텍스트논제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8>

<https://brunch.co.kr/@myf21/3>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45814>

심화논제

<https://www.yna.co.kr/view/AKR20160912166000065>

<https://jung92.tistory.com/entry/%EC%A0%9C-3%EC%B0%A8-%EC%96%B4%EB%A6%B0%EC%9D%B4%EC%A7%91-%ED%91%9C%EC%A4%80%EB%B3%B4%EC%9C%A1%EA%B3%BC%EC%A0%9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05091200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5>